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세은** 박종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에 만 60세인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이 두 연금이 가구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소비의 가치분소득 탄력성은 연금 없는 가구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연금별로 표본을 분할한 모형과 전체 표본에서 상이한 효과를 포착하고자 한 모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기초연금의 효과만을 따로 분석해본 결과 수급 가구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비수급자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 소득이 소비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두 범주의 소득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공적연금소득이 그 외 소득보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비효과, 고령자 가구, 국민노후보장패널

투고일: 2020. 10. 30. 게재확정일: 2020. 11. 24.

* 본 논문은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seeun@cnu.ac.kr)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js.park.tf@gmail.com)

I. 서론

인구고령화는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고령 인구는 생산 능력과 소비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대거 빈곤층을 형성하여 분배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 계층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한 사회는 노동역량이 있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적절한 생계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로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과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대다수 고령자 가계에 있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정치 및 경제 민주화 직후인 1988년에 도입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199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들을 포괄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사업장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2차 개혁이 논의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고령자 계층을 위해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에 현재의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두 연금은 수급액 규모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용돈연금이라는 무시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다수의 고령자 가계의 안정적 수입원으로서 기초적인 소득안정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점차 납입기간이 충분히 긴 가입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향후 제도 재설계를 통해 두 제도의 수급액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두 연금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원천이 됨에 따라 이들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들의 소비 증가는 삶의 안정성과 안락함을 제고할 뿐 아니라 특히 내수 활성화 효과도 낳을 것으로 예상되어 빈곤문제 해결뿐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금액 규모가 큰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비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인한 고령 계층의 소득 증가는 그만큼 그들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엇갈리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해왔다. 이 연금들이 고령 계층의 빈곤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해 왔지만 고령 계층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얼마 안 되는 선행연구들 중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많았다. 소비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그 이유로서 고령 계층에 대한 공적 연금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확대 효과가 없다거나 고령계층이 소비성향이 매우 낮아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 등을 제시해 왔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공적연금이 고령계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 변화에 주목하여 보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의 4차~7차 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에 만 60세였던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선택하고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을 구축한 후 이를 가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이 이들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므로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이 되어서야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2008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그 효과가 충분히 분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는 [표 1]과 같으며 특히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및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들은 사용한 미시자료와 분석 시기, 분석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박정수·김준기 2015; 이채정·권혁주 2016; 이진형·정지운 2018; 이주현·이대웅·권기현 2018; 장현주 2019)도 있지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강성호·임병인 2011; 서영빈·송헌재 2015; 이지혜·황남희 2019; 김경수 2019; 한지형·고대균 2019)도 있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들은 기초연금을 고려하지 못하였거나(강성호·임병인 2011; 장현주 2019),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만을 분석하였거나(이채정·권혁주 2016),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연금을 분리하지 않았거나(서영빈·송헌재 2015; 한지형·고대균 2019), 기초연금액의 상향조정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이진형·정지운 2018)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두 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2011년 조사자료부터 입수 가능한 최근 자료인 2017년 조사자료를 가지고 균형패널 표본을 구성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공적연금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과 심적회계이론에 모두 기대고자 한다. 대부분의 소비 연구자들이 의거하는 이론은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Ando & Modigliani 1963; Friedman 1957; Modigliani & Brumberg 1954)이다. 이 이론은 소득 원천별 한계소비성향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추정되면 가처분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별 소득

의 한계소비성향도 가처분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같다고 가정된다. 사실 이 가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정이다. 근로소득으로 들어왔든 금융소득으로 들어왔든 소득은 그냥 소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원천별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심적회계이론(Thaler 1980, 1990; Kahneman & Tversky 1979)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Shefrin & Thaler 1988)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원천별로 가계가 보이는 한계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정리

구분	자료	분석방법	주요 결론
강성호·임병인 (2011)	국민노후 보장패널	회귀 분석	- 공사적연금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소비성향이 큰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음.
서영빈·송헌재 (2015)	노동패널	회귀 분석	- 중고령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순으로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은퇴가구의 소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박정수·김준기 (2015)	복지패널	-	-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지지해줄 수는 있으나,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낮아 소득보장으로서의 보완이 미흡하므로 수급액을 현실화할 필요 제기
이채정·권혁주 (2016)	한국복지 패널	이중 차분	-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이진형·정지운 (2018)	국민노후 보장패널	이중 차분	- 공적연금이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주현·이대웅 ·권기현 (2018)	한국복지 패널	회귀 분석	-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소비지출과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초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저소득층 소득을 감소시켰음.
이지혜·황남희 (2019)	복지패널	회귀 분석	-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현주 (2019)	국민노후 보장패널	회귀 분석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가구균등화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지형·고대균 (2019)	국민노후 보장패널	회귀 분석	- 고령가계의 소비지출은 가계 유형별로 서로 다른 소득원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력도 유형별로 다름. - 고령가계의 소비지출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같은 정기적 성격을 갖는 소득원천에 의존.
김경수 (2019)	고령화 연구패널	회귀 분석	- 이전소득은 소비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정은 생애주기-항상소득이론(Ando & Modigliani 1963; Friedman 1957; Modigliani & Brumberg 1954)의 가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공적연금과 공적연금 이외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안정적인 소득과 불안정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원천별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박종선·황덕순 2014). 향후 추정 과정에서는 이 두 이론을 모두 활용해서 추정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III. 자료소개와 분석모형

1. 자료 소개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공단이 격년제로 조사하는 자료로서 조사 자료의 소득, 지출은 조사년도의 한 해 전 자료이고, 자산, 부채 및 가계특성은 조사년도의 자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7차 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년도는 2017년 소득, 지출 기준년도는 2016년도, 자산, 부채 및 가계특성 기준년도는 2017년도이다.

추정을 위한 표본을 설정함에 있어 분석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조사년도 만 61세 이상)으로 하고, 단독 또는 부부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 패널을 구성할 것이다. 4차 년도(2011년 조사)에 만 61세 이상 고령자 가계를 선택하게 되면 2010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가계를 선택하게 되는 셈이다. 균형 패널을 구축하기 때문에 7차 조사 자료에 이르면 만 66세 미만 표본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표본을 구축하면 총 1,567 가구, 6,268개 관측치가 확보된다.¹⁾ 수급연금별 가구 수와 비중은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두 연금의 역할이 크다 ([표 2] 참조).

[표 2] 수급 연금 유형별 가구현황

	전체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기초연금 (Only)	국민연금 (Only)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Both)	지역 연금	비수급
가구수	6,263	4,987	2,717	1,051	1,219	518	758
비중	100%	80%	43%	17%	19%	8%	12%

주: 지역연금 수급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42가구(4차 16가구, 5차 21가구, 7차 5가구)가 포함.

출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 이용. 저자 작성.

1) 국민연금 미성숙으로 인해 실증분석 대상기간(노후보장패널 4차~7차, 2010~2016년)동안 노령연구 수급자는 60세 이상~64세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다. 만일 고령자를 65세로 정의할 경우 현 고령자 가계의 국민연금 효과 분석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대다수가 분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3] 수급 연금 유형별 월소득 및 월연금액, 순자산

(단위: 만원)

변수	구분	가구유형						
		전체 가구	공적연금 수급가구	가구유형			직역연금 수급가구+	비수급
				국민연금 (Only)	기초연금 (Only)	국민·기초 (Both)		
소득 (가처분소득, 만원, 월)	평균	116	104	180	71	110	244	109
	표준편차	127	123	199	72	95	129	100
	25분위수	46	44	78	35	59	153	39
	50분위수	80	73	140	55	89	237	86
	75분위수	147	126	223	87	138	313	152
	사례수	6,255	4,986	1,057	2,717	1,212	518	751
연금액 (만원, 월)	평균	35	24	33	16	36	189	-
	표준편차	57	17	23	7	15	101	-
	25분위수	10	15	17	10	25	122	-
	50분위수	20	20	25	15	32	200	-
	75분위수	32	31	42	20	43	244	-
	사례수	6,263	4,992	1,058	2,722	1,212	518	
순자산 (만원, 현재)	평균	16,166	13,520	31,406	7,991	10,387	29,829	24,255
	표준편차	29,232	25,980	47,947	11,676	10,840	44,183	32,432
	25분위수	3,230	2,883	7,824	1,666	3,605	10,000	4,436
	50분위수	8,346	7,302	17,600	5,216	7,950	18,320	12,232
	75분위수	17,578	15,000	36,000	10,432	13,493	33,612	33,268
	사례수	6,258	4,984	1,053	2,720	1,211	517	757

주: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하는 69 관측치가 포함되었음.

수급연금별 가구 유형의 가처분소득, 연금액, 순자산 규모를 살펴보자. 가처분소득은 전체 표본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월 116만원이고 직역연금 수급가구가 가장 많아서 244만원,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가 180만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그 외는 매우 작다. 공적연금 비수급가구는 가처분소득이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와 별 차이가 없는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비가입 자영업자이면서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못 받는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2) 비수급가구의 연령은 평균 72세(sd=7세)이며 25분위의 연령은 67세, 50분위의 연령은 71세, 75분위의 연령은 77세로 조사되었다. 수급가구의 연령은 평균 74세(sd=6세)이며 25분위의 연령은 70세, 50분위의 연령은 74세, 75분위의 연령은 78세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비수급가구의 연령이 수급가구의 연령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8.68$, $p<.001$).

연금유형별 가구의 연금수급액을 살펴보면 직역연금 가구가 큰 차이를 보일 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수급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액 분포를 보면 75분위가 42만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고령 계층 하위 70%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로 인해 일부는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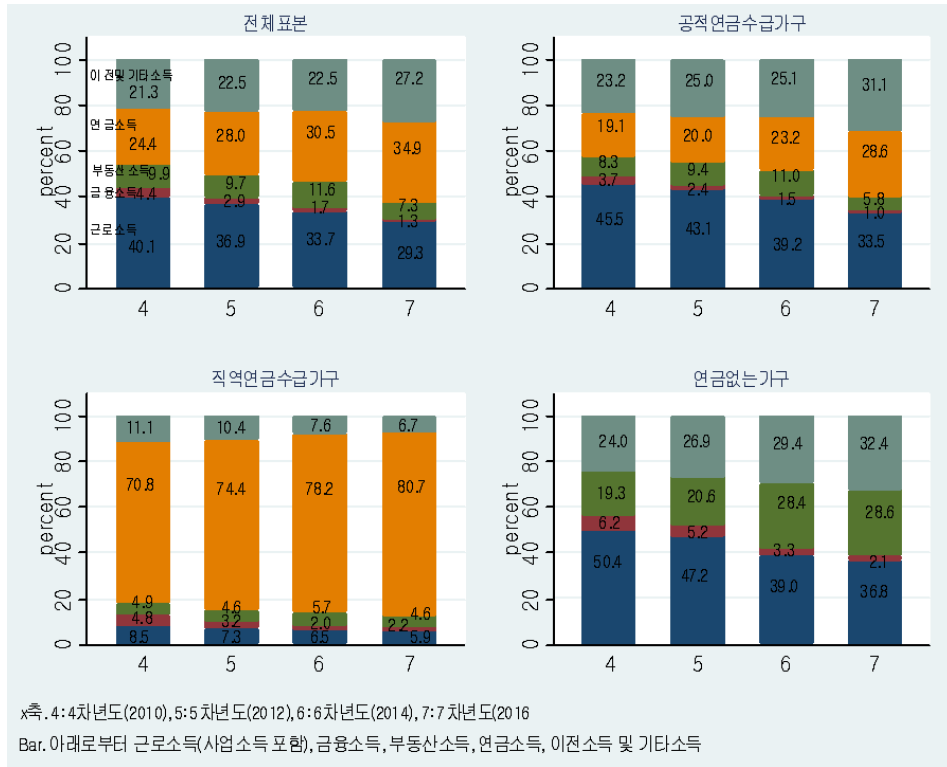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어업소득 및 부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소득은 모두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정의하였다.³⁾

이제 [그림 1]을 통하여 소득원천별 구성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자. 전체 표본의 경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의 구성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4차 년도(2010년 소득)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40.1%) 공적연금소득(24.3%), 기타소득(21.4%)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7차 년도(2016년 소득)는 연금소득이 가장 높은(34.9%) 비중을 차지하였다. 각 유형별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수급가구가 전체표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역연금 수급가구는 연금이 매우 큰 비중을, 연금 없는 가구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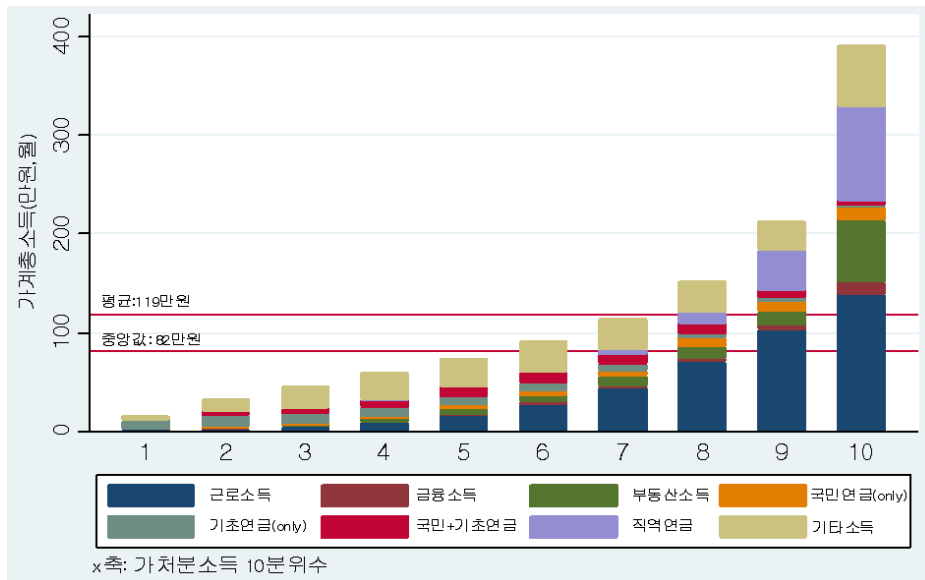
소득분위에 따른 총소득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그림 2] 참조).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모든 소득원천이 증가하는데 특히 노동소득(임금소득 및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원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한편 자산소득 중 고령 계층에게는 금융소득보다 부동산소득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10분위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그 크기는 작지만 전 소득계층에서 두루 두루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9분위, 10분위의 경우 직역연금의 역할이 뚜렷했다.

3)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과 정의가 다름에 주의를 요하며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공적연금 외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외 연금형태의 소득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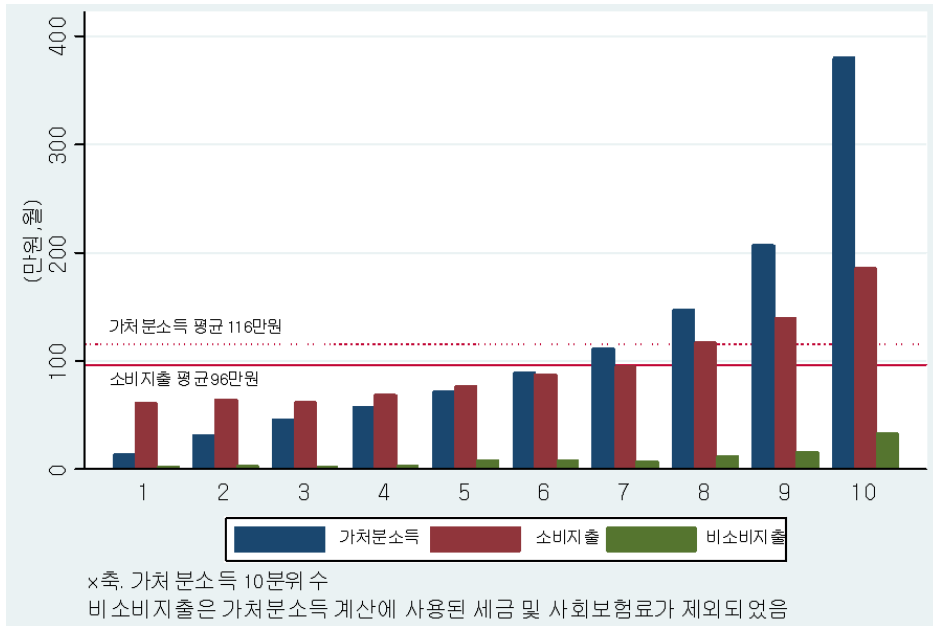
[그림 1] 가처분소득 중 소득 원천별 비중



[그림 2] 소득분위별 가계 총소득 구성



[그림 3] 소득 분위별 소득과 소비지출



소득 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1분위~3분위까지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상관없이 소비지출이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즉 월 80만원 정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간에 대해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가 의미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계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수급 연금 유형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국민 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만 (only)	기초연금만 (only)	국민·기초 (both)	직역연금	연금 없는 가구
0.8478	0.7397	0.9864	0.8014	0.6272	1.0252

집단별 평균소비성향의 수준 수급 연금에 따른 가구 유형별 평균소비성향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다. 대체로 소득 규모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소비함수의 탄력성이 구해지면 이 평균소비성향과 곱해져 한계소비성향이 구해진다.

2. 분석모형

소비지출과 소득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비함수형태로 수준변수모형(이하 'level'), 이중로그모형, 가격독립 일반로그모형(이하 'PIGLOG') 등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Anker 2011).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의 산점도(level), 로그 소비지출과 로그가처분소득의 산점도(이중로그), 소비-소득비율과 로그가처분소득의 산점도(PIGLOG) 및 각 모형의 비모수 kernel 회귀 추정량 등을 통해 추정에 사용할 모형을 탐색하였다.

탐색결과 이중로그모형이 수준변수모형 및 PIGLOG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첫째, 소비지출에 대한 가처분소득의 예측값 및 소비-소득 산점도의 추세치가 선형성을 보여 주어 선형소비함수모형에 보다 더 적합하고, 둘째, 소비-소득 조합 분포가 예측값에 몰려있는 정도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어 최소분산추정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중로그 소비함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개체특성 (u_i)에 대한 가정에 따라 추정모형이 결정된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체 특성과 독립변수간의 공분산을 허용하며, 확률효과모형은 공분산이 0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할 통제변수 중에는 시간불변변수가 많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면 시간불변변수의 모수는 추정할 수 없다. 물론 시간불변변수 중 조사연도별로 다른 값을 보이는 일부 사례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가구주 사망 등으로 가구주 자체가 바뀌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간불변변수가 극히 일부의 사례로 인해 시간가변 변수로 인식되어 추정되는 경우처럼, 가구 내 변동이 극히 제한적이면 고정효과모형은 부정확한 추정량을 제공한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p158). 국가 패널이나 자치단체패널 자료는 고정효과모형을 주로 사용하지만, 가구 패널은 주로 확률효과모형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가구특성과 독립변수들 간에 독립성을 가정하는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량을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소비함수 추정식의 통제변수에 연령변수가 포함된다. 그런데 본 연구와 같이 균형 패널을 사용할 경우, 시간특성을 반영할 연도변수와 연령변수가 완벽한 선형관계를 갖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도변수를 별도로 설정하는 대신 연령변수를 통해 시간 특성을 통제하기로 한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네 개의 추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하첨자 i, t 생략). 모형 1과 2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 1은 가처분소득을 설명변수로 하되 수급하는 연금유형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여 전체 표본과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다. 표본을 분할하여 가구유형별로 탄력성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된 서로 다른 탄력성과 평균소비성향을 이용하여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다. 모형 2는 전체 표본을 가구유형별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 표본 내에서 가구유형별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모형 1과 모형 2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통합하여 공적연금 가구로 분류하여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였는데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기 위해 모형 3을 설정하였다. 이는 고령층 가계의 70% 가까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소비효과를 따로 추정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전체 표본을 사용하되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가구를 구별하였다.

모형 4는 연금소득과 연금 외 소득이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각각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모형 1~모형 3까지의 가정과는 다른 것이다. 모형 1~모형 3은 모든 소득원천이 동일한 한계소비성향을 갖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단 연금 비수급 가구는 제외하고 국민, 기초, 직역 연금 중 하나라도 수령하는 가구는 모두 포함한 표본을 사용하였다.

[표 5] 추정모형의 소개

모형	모형의 세부 내용
모형 1	유형별 표본 분할을 통한 소비성향 추정 $\ln C = \beta \times \ln M + X \times \gamma + u + e$ C: 소비지출, M: 가처분소득, X: 상수항을 포함한 통제변수의 행렬
모형 2	표본 분할 없이 소비성향 추정 $\ln C = \beta_1 \times \ln M + \beta_2 \times type2 + \beta_3 \times type3 + \beta_4 \times (\ln M \times type2) + \beta_5 \times (\ln M \times type3) + X \times \gamma + u + e$ type1: 공적연금 수급가구(참조변수), type2: 직역연금 수급가구(더미변수), type3: 연금 없는 가구(더미변수). C, M, X는 모형 1과 같음.
모형 3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비성향 추정 $\ln C = \beta_1 \times \ln M + \beta_2 \times bp + \beta_3 \times (\ln M \times bp) + X \times \gamma + u + e$ bp: 기초연금수급 = 1, 비수급 = 0, C, M, X는 모형 1과 같음.
모형 4	공적연금과 그 외 소득의 차별적 영향 추정 $\ln C = \beta_1 \times \ln Mnp + \beta_2 \times \ln P + X \times \gamma + u + e$ Mnp: 연금소득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P: 연금소득, C, X는 모형 1과 같음.

종속변수인 소비지출(C)은 지출목적별 12개 소비지출항목의 총합의 자연대수값이다. 모형 1~모형 3의 설명변수인 가처분소득(M)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자연대수값이다. 모형 4의 연금소득 외 가처분소득(Mnp)과 연금소득(P)은 최소값이 1이 되도록 분포 이동 후 각각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다. 모형 1~모형 4의 통제변수는 [표 6]에 정리했다.

[표 6] 소비함수 통제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일인가구여부	참조변수: 일인가구, 더미변수: 부부가구
거주지역	참조변수: 서울시, 더미변수: 광역시, 도
성별	참조변수: 여성, 더미변수: 남성
연령	연령제공항은 포함하지 않음.
학력	참조변수: 고졸미만, 더미변수: 고졸이상
취업여부	참조변수: 미취업, 더미변수: 취업
자가여부	참조변수: 비자가, 더미변수: 자가
ln순자산	부(-)의 순자산이 많으므로 순자산 최소값이 1이 되도록 분포이동 후 자연로그변환

IV. 분석 결과

1. 모형 1: 유형별 표본 분할을 통한 소비성향 추정

추정결과([표 7] 참조)를 보면 전체 표본의 경우,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0.0872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도가 높았다. 가구유형별로 분할한 하위 표본 집단들의 가처분소득 추정치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도도 높았다. 직역연금 가구가 0.1747로서 탄력성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공적연금 가구도 0.1686으로서 그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연금 없는 가구의 경우 0.0390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집단과 가구유형별 하위 집단들의 평균소비성향은 서로 다른데 이를 이용하여 한계소비성향을 구하면 전체 표본의 경우 0.0724, 공적연금 가구의 경우 0.1436, 직역연금 가구의 경우 0.1096, 연금 없는 가구의 경우 0.0392로 계산되었다.

[표 7] 모형 1 추정결과

변수	전체표본	공적연금 수급가구	직역연금 수급가구	연금없는 가구
로그가처분소득	0.0866*** (0.0102)	0.1648*** (0.0194)	0.1804*** (0.0479)	0.0403*** (0.0116)
로그순자산	0.2919+ (0.1539)	0.2261 (0.1479)	0.4519*** (0.1051)	0.4375*** (0.1102)
남성d1	0.1561*** (0.0296)	0.1543*** (0.0282)	0.0982 (0.1228)	0.1126 (0.0858)
연령	-0.0127*** (0.0013)	-0.0124*** (0.0015)	-0.0068+ (0.0040)	-0.0080* (0.0035)
고졸이상d2	0.2993*** (0.0325)	0.2009*** (0.0314)	0.2677*** (0.0632)	0.3518*** (0.0550)
부부가구d3	0.2397*** (0.0297)	0.2263*** (0.0287)	0.0804 (0.1167)	0.3062*** (0.0805)
광역시d4	-0.0887* (0.0388)	-0.0881* (0.0353)	-0.0626 (0.0828)	-0.0035 (0.0704)
도d4	-0.1590*** (0.0367)	-0.1705*** (0.0335)	-0.1183 (0.0825)	-0.0267 (0.0631)

변수	전체표본	공적연금 수급가구	직역연금 수급가구	연금없는 가구
취업자d5	0.0601*** (0.0175)	0.0553** (0.0207)	-0.0674 (0.0646)	0.0473 (0.0464)
자가d6	0.0206 (0.0301)	0.0177 (0.0278)	-0.1413* (0.0645)	-0.0982 (0.0616)
상수	3.7248* (1.7159)	3.9152* (1.6243)	1.2417 (1.2525)	2.0850+ (1.2019)
Wald χ^2	2387.87***	2296.52***	196.00***	274.08***
관측치	6124	4872	510	742
가구수	1531	1340	152	408
가처분소득의 APC	0.8335	0.8548	0.6240	1.0271
가처분소득의 MPC	0.0722	0.1408	0.1126	0.0414

주: 1) 괄호안은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d는 더미변수이며 대응하는 참조변수는 d1: 여성, d2: 고졸미만, d3: 일인가구, d4: 서울시, d5: 미취업자, d6: 비자가

2. 모형 2: 표본 분할 없이 유형별 소비성향 추정

모형 2의 추정결과(표 8] 참조)를 보면 로그가처분소득과 직역연금수급가구 더미변수의 상호작용은 0과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로그가처분소득과 연금 없는 가구 더미변수의 상호작용은 부(-)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득탄력성은 0.1649로서 연금 없는 가구의 소득탄력성 0.0429보다 더 크다. 모형 2의 탄력성 추정치가 모형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으로부터 우리는 고령자 가계가 직역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갖게 된다면, 소비효과가 커질 것을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고령자 가계가 국민연금이나 직역 연금을 단기간에 갖추는 것이 현실성이 적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액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모형 2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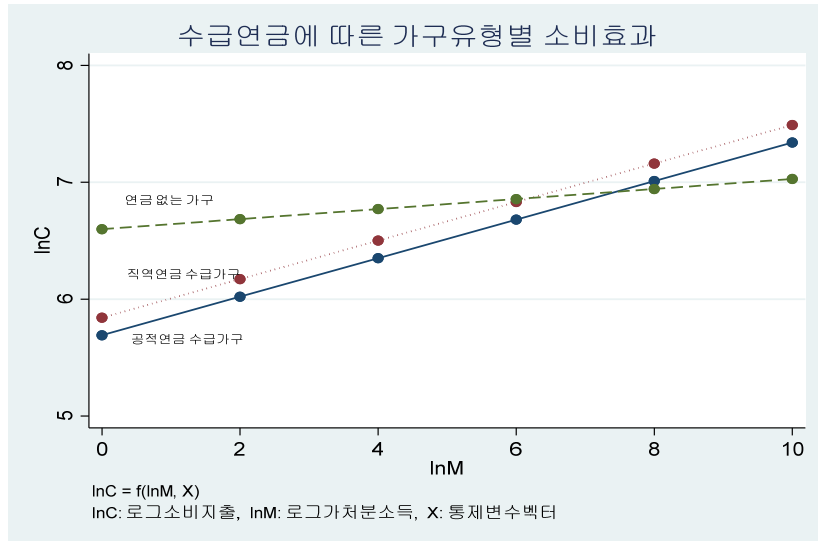
변수	Coefficient	SE
로그가처분소득(m)	0.1616***	(0.0182)
직역연금수급dp (β_{11})	0.0860	(0.3069)
연금비수급dp (β_{12})	0.8772***	(0.1361)
로그가처분소득 × 직역연금수급dp (β_{21})	0.0080	(0.0396)
로그가처분소득 × 연금비수급dp (β_{22})	-0.1169***	(0.0193)
로그순자산	0.2696+	(0.1423)
남성d1	0.1501***	(0.0276)
연령	-0.0112***	(0.0013)
고졸이상d2	0.2409***	(0.0293)
부부가구d3	0.2189***	(0.0281)
광역시d4	-0.0820*	(0.0354)
도d4	-0.1527***	(0.0335)
취업자d5	0.0422*	(0.0187)
자가d6	0.0059	(0.0277)
상수	3.3626*	(1.5553)
Wald χ^2	3009.98***	
관측치	6124	
가구수	1531	
공적연금 수급가구 가처분소득의		
Elasticity	0.1616	
APC	0.8548	
MPC	0.1381	
직역연금 비수급가구 가처분소득의		
Elasticity	0.1696	
APC	0.6240	
MPC	0.1058	
연금소득 없는 가구 가처분소득의		
Elasticity	0.0447	
APC	1.0271	
MPC	0.0459	

주: 1) SE는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d는 더미변수이며 대응하는 참조변수는 d1: 여성, d2: 고졸미만, d3: 일인가구, d4: 서울시, d5: 미취업자, d6: 비자가, dp: 공적연금수급가구

[그림 4] 수급연금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비효과(APEs)



한편 [그림 4]는 모형 추정결과([표 8] 참조)를 토대로 수급하는 연금에 따른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표현한 것이다. 연금 없는 가구를 살펴보면, 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없는 절편에서의 소비수준이 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소비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기울기 또한 평탄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해도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다.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절편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기울기는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연금 없는 가구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다.

추정결과는 위와 같이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소비행태가 비슷하고 연금 없는 가구와 이 가구들의 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수준은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연금 없는 가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역연금 수급가구는 연금 없는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연간 1,686만원 높아($p < .001$) 두 가구 간 소득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연금 없는 가구의 소득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표 9] 참조).

[표 9] 수급연금에 따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의 차이

가구유형	평균	표준편차	Scheffe	F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수급가구	1,244	1,431	b	315.80***
직역연금 수급가구	2,955	1,554	a	
연금 비수급 가구	1,299	1,202	b	
전체	1,392	1,49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비함수와 연금 없는 가구의 소비함수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득의 안정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소비가 전 생애에 걸쳐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을 기준으로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이루도록 결정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은 항상소득의 성격이 강하여 소비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연금 없는 가구는 가계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생활비와 같이 목표 소비지출 규모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회성 소득으로 여겨져(Mental accounting) 비소비계정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가계소비가 가처분소득 증가에 둔하게 반응하게 되고 가처분소득 외 사회 인구적 특성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림 4]의 완만한 소비함수 기울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주는 함의는 만일 고령 저소득층에 소득보전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의도한다면, 일회성 소득보전 프로그램보다는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보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고령자 계층의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3. 모형 3: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비성향 추정

모형 3의 추정 결과는 [표 10]과 같다. 기초연금 수급여부 더미변수가 부(-)의 부호로 유의($\beta_1 = -0.7987$, $p < .001$)한 것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소비수준도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여부와 로그가처분소득의 상호작용이 정(+)의 부호로 유의한 것은($\beta_1 = 0.0958$, $p < .001$),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소득탄력성이 비수급가구의 소득탄력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탄력성은 0.1667로서 비수급자 가구의 소득탄력성 0.0709보다 크다. 이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기초연금 비수급 가구에 비해 가계소비를 더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증가의 소비증가 효과는 클 것이다.

[표 10] 모형 3 추정결과

변수	Coefficient	SE
로그가처분소득(n)	0.0715***	(0.0100)
기초연금수급db(β_1)	-0.7843***	(0.1391)
로그가처분소득 × 기초연금수급db(β_2)	0.0926***	(0.0198)
로그순자산	0.2575+	(0.1393)
남성d1	0.1409***	(0.0283)
연령	-0.0087***	(0.0014)
고졸이상d2	0.2629***	(0.0281)
부부가구d3	0.2220***	(0.0287)
광역시d4	-0.0640+	(0.0343)
도d4	-0.1367***	(0.0326)
취업자d5	0.0387*	(0.0182)
자가d6	0.0022	(0.0271)
상수	4.0510**	(1.5349)
Wald χ^2	2850.76***	
관측치	6124	
가구수	1531	
기초연금 수급가구 가처분소득의		
Elasticity	0.1642	
APC	0.9069	
MPC	0.1489	
기초연금 비수급가구 가처분소득의		
Elasticity	0.0715	
APC	0.7703	
MPC	0.0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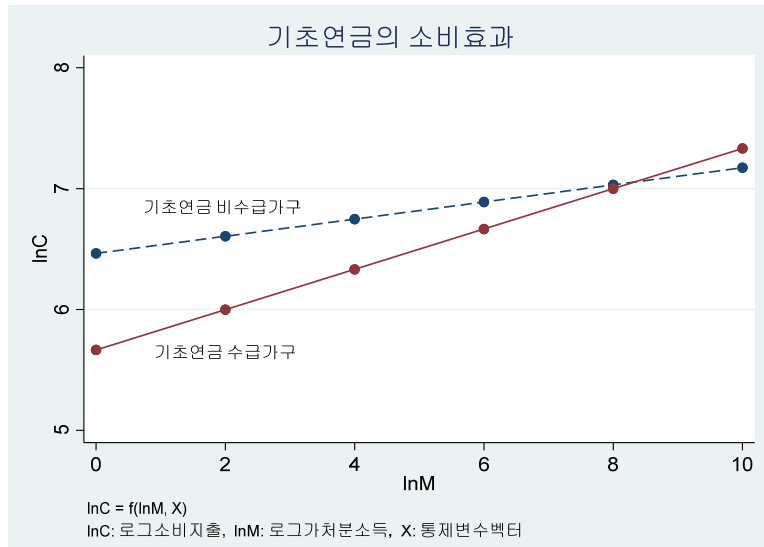
주: 1) SE는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d는 더미변수이며 대응하는 참조변수는 d1: 여성, d2: 고졸미만, d3: 일인가구, d4: 서울시, d5: 미취업자, d6: 비자가, db: 기초연금비수급

[그림 5]는 모형 추정을 토대로([표 10] 참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한계효과(APE)를 표현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절편)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소비수준이 낮지만,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수준의 증가속도(기울기)는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더 크다.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서(연간소득차이 = 1,034만원, $t=27.71$, $p<.001$) 소비수준도 낮지만, 기초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수급가구에서 동일한 규모의 추가적인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소비확대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림 5] 기초연금의 소비효과(APEs)



4. 모형 4: 공적연금과 그 외 소득의 차별적 영향 추정

모형 4는 고령자 가구가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외 소득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정이다.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함수 추정결과([표 11] 참조), 우선 전체 표본 추정의 경우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외 소득이 소비지출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연금소득이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 외 가처분소득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대신 직역연금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모형 4 추정결과

변수	전체가구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수급가구	직역연금 수급가구
로그가처분소득 (연금제외)	0.0380*** (0.0050)	0.0474*** (0.0058)	0.0093 (0.0089)
로그연금소득	0.1323*** (0.0128)	0.0912*** (0.0154)	0.1152* (0.0476)
로그순자산	0.2650+ (0.1554)	0.2432 (0.1576)	0.4718*** (0.1198)
남성d1	0.1628*** (0.0295)	0.1638*** (0.0294)	0.1049 (0.1272)
연령	-0.0138*** (0.0014)	-0.0140*** (0.0015)	-0.0078+ (0.0041)
고졸이상d2	0.2508*** (0.0316)	0.2149*** (0.0329)	0.2763*** (0.0666)
부부가구d3	0.2075*** (0.0295)	0.2280*** (0.0296)	0.0715 (0.1187)
광역시d4	-0.1074** (0.0376)	-0.1042** (0.0371)	-0.0787 (0.0854)
도d4	-0.1768*** (0.0359)	-0.1833*** (0.0353)	-0.1487+ (0.0848)
취업자d5	0.0826*** (0.0184)	0.0890*** (0.0191)	-0.0168 (0.0699)
자가d6	0.0076 (0.0286)	0.0123 (0.0289)	-0.1498* (0.0661)
상수	3.7574* (1.7213)	4.1644* (1.7466)	1.6015 (1.4267)
Wald χ^2	2646.67***	2117.07***	140.31***
관측치	5382	4872	510
가구수	1461	1340	152
가처분소득(연금제외)			
APC	1.2307	1.1192	2.7286
MPC	0.0468	0.0530	0.0253
연금소득			
APC	1.2307	1.1192	2.7286
MPC	0.1629	0.1020	0.3143

주: 1) 괄호안은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d는 더미변수이며 대응하는 참조변수는 d1: 여성, d2: 고졸미만, d3: 일인가구, d4: 서울시, d5: 미취업자, d6: 비자가

공적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소비함수 추정결과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0.1300($p < .001$)로 확인되었다. 즉 연금소득이 1%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0.13%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연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0.0387($p < .001$)이며, 연금소득의 탄력성이 가처분소득탄력성(연금제외)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Wald $\chi^2 = 52.2$, $p < .001$).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비함수 추정결과 공적연금소득의 소득탄력성은 0.0876($p < .001$)으로서 가처분소득(연금제외)의 소득탄력성 0.0487($p < .001$) 보다 유의하게 더 크다(Wald $\chi^2 = 6.05$, $p < .05$). 한편 직역연금 수급가구는 연금소득의 소득탄력성이 0.1084($p < .05$)로 확인된 반면 가처분소득(연금제외)의 소득탄력성은 0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의 고령자 가계의 소비행동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20년 이상자의 수급개시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행태를 통해 향후의 공적연금의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V. 결 론

공적연금의 증가가 고령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0년대 들어 수행된 연구들은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몇몇 연구들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양(+)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8년이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이 개시되기 시작한 해이고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08년 직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10년에 만 60세인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선택하고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을 구축한 것을 기본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강건성 검토를 위해 불균형패널, 그리고 5차 조사자료를 통합한 통합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가계에 대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 가계에 대한 공적연금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의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선행연구들 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다룬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타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는 확인되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다. 향후 공적연금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더욱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이것과 평균소비성향을 곱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탄력성 추정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 0.0724, 공적연금 가구의 경우 0.1436, 직역연금 가구의 경우 0.1096, 연금 없는 가구의 경우 0.0392로 계산되었다. 표본을

분할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수급가구와 직역연금 수급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득탄력성은 0.1649로서 연금 없는 가구의 소득탄력성 0.0429보다 더 크게 도출되었다. 이것은 연금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수급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비수급가구의 동일한 소득 증가보다 더욱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공적연금의 안정성이 수급가구들의 높은 소비성향을 야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연금 중에서도 하위 60%~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효과를 따로 분석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탄력성은 0.1667로서 비수급자 가구의 소득탄력성 0.07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했을 당시의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했을 때에는 흑자가계에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뚜렷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연금소득과 연금 외 소득이 소비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해 본 결과, 연금 소득과 연금 외 소득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연금소득이 연금 외 소득보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연금별로 가구를 분할하여 다시 분석해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 외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대신 직역연금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 비공적연금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큰 것은 아무래도 공적연금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확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비공적연금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고령자 가구에 대한 공적연금이 커질수록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소비효과가 커질 것을 전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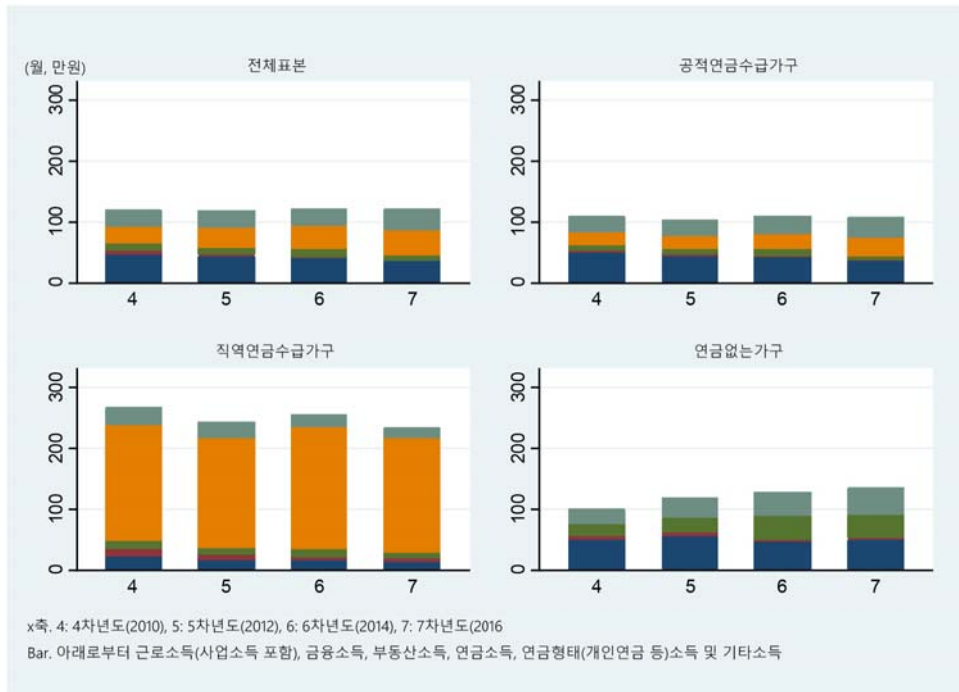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성호·임병인, “연금자산 존재 및 형태의 노인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효과,” 「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87~114쪽.
- 김경수, “고령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NABO 산업동향 & 이슈」 통권 제17호, 국회예산정책처, 2019, 41~54쪽.
- 박정수·김준기,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인 가구의 65세 전후 회귀단절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345~370쪽.
- 박종선·황덕순, “가계 주 소득 원천과 소득 분위에 따른 가계 유형별 심적 회계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2014, 115~143쪽.
- 서영빈·송헌재,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15, 119~147쪽.
- 이주현·이대웅·권기현,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3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75~105쪽.
- 이지혜·황남희,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1~38쪽.
- 이진형·정지운,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비행태 비교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2018.
- 이채정·권혁주,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3호, 한국정부학회, 2016, 365~388쪽.
- 장현주,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1호, 한국정책학회, 2019, 305~328쪽.
- 한지형·고대균, “고령가계의 은퇴 여부에 따른 소득유형 구분과 유형별 소비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소비자학회, 2019, 65~90쪽.
- Ando, A. and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 no.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63, pp.55-84.
- Anker, R., “Engel's Law Around the World 150 Years Later,”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247,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1.

- Friedman, M.,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Kahneman, D. and Tversky,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47 no.2, The Econometric Society, 1979, pp.263-291.
- Modigliani, F. and Brumberg, R.,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Post Keynesian Economics*(1954), Reprinted in *the The Collected Papers of Franco Modigliani*, vol.6, MIT Press, 2005.
- Rabe-Hesketh, S. and Skrondal,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3th edition), Stata press, 2012.
- Shefrin, H. M. and Thaler, R. H.,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vol.26 no.4,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1988, pp.609-643.
- Thaler, R., "Toward a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1 no.1, Elsevier, 1980, pp.39-60.
- Thaler, R. H., "Anomalies: Saving, Fungibility, and Mental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4 no.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90, pp.193-205.

[부록] 소득 원천별 가처분소득

[그림 1] 가처분소득의 소득 원천별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에 대응하는 소득액 추이를 부록으로 제시한다.



Impact of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on the Consumption in Elderly Korean Households

Jeong Se-eun* Park Jong-se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ffect Korean Elderly households consumption by establishing a balanced panel for elderly single households and elderly couples aged 60 in 2010 using the fourth to seventh survey data of the National Elderly Security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asticity of disposable income for household consumption receiving national pension or basic pension is greater than that of households without pension.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for both the model of dividing samples by pension and the model of capturing different effects from the entire sample. Second, a separate analysis of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showed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household consump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non-basic pension receiving households. Third, an analysis of whether public pension income and other income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consumer spending found that both categories of incom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spending, but public pension income has a greater influence on consumer spending than other income.

□ Keywords: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Consumption, Korean Elderly Household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 First Author,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